이슈브리핑18-17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ISSUE BRIEFING 2018

0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이준혁 · 김보미(북한연구실)

2018년 5월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 하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군사노선과 정책 등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2016년 5월 노동당 7차대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북한의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강행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선 대안적 군사력 강화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대내적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대회의 개최 배경과 의도를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당중앙군사위 회의가 크게 ① 군부의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안 마련, ② 새로운 국가방위개선 대책 논의, ③ 인사조치, ④ 인민군 처우개선과 군의 체제보위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분석하였다.

1. 비핵화 결정 수용 촉구와 향후 군축 대응방안 마련

비핵화 설득과 군부의 사명감 제고

이번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부가 비핵화 정책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군의 사명감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관료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군부는 그 어떤 관료제보다 변화에 민감한 조직이다. '만능의 보검'으로 여겨지던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군부의 안보우려를 증폭시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폐기와 군축에 따른 안보공백을 메우고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핵·경제병진노선이 종료되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한과 단계적인 군

축에 합의하였으며 미국과는 체제보장을 대가로 비핵화 논의에 들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작전개념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군이 당중앙위원회 제 7 기 제 3 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무적의 총창으로 튼튼히 보위하고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는 부분은 전 군이 비핵화 결정을 받들고 흔들림 없이 체제수호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핵화 및 군축 대비 대응방안 마련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비핵화와 군축 과정에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문제 뿐만 아니라 6월 14일 장성급 군사회담을 앞두고 대응 방안에 대한 사전논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비핵화 합의 내용에 상응하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한국과 미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철수를 당장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 전략무기 도입 및 전개 금지 등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NLL 공동어로수역화, DMZ 지뢰 제거 문제, 개성공단 확장시 전략요충지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작전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무력성과 총참모부의 역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정치국은 인민군 보위사령부와 협조 하에 총참모부나 인민무력성이 김정은의 의도와 배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군부내 비관적인 동향을 해소시키기 위한 사상교양과 당국의 비핵화 정책을 대미굴복으로 묘사하는 불순분자 색출에도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국가방위 개선대책 논의

군의 현대화 계획 수립

회의에서는 핵폐기에 따른 전략군의 해체·개편 논의가 진행되거나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방위계획이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비핵화를 선언하였음에도 일부 핵전력을 은폐한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무기가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핵무기의 존재가 인식되어야만 한다. 핵무기를 폐기하게 되면 재래식 무기가 유일한 전투·방어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modernization)·정교화(sophistication)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낙후되고 제재에 의해 무기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 따라서 정상국가의 군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군사 효율성(military effectiveness)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일정 정도 재래식 전력의 강화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군대현대화방침을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방침들을 제시하였다”고 한 데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북한군의 현대화 속도는 경제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외교 강화

북한은 향후 핵폐기에 따른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외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이 회의에서 다루어졌을 수 있다. 북한은 몇 가지 안전보장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군사교류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북한은 2011년 김정일 사후 중단된 북중 군사교류를 재개하고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사드의 조속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핵포기 이후 재래식 전력에 의거한 국가방위전략이 요구되는 현실에 맞게 러시아와의 군사교류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 2014년 11월, 당시 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방러하여 러시아 군 작전총국장과 북러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 4월 초에는 현영철 인민무력상이 방러하여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만나 군사교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북한은 노동신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러시아의 5세대 ICBM 사르마트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향후 북한군의 선진 무기개발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중국·러시아와의 군사교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인사조치

총정치국장 교체를 통한 당적 통제 강화

확대회의 보도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을 해임 및 임명,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운 간부들을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를 다루었다. 이후 5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장 현지지도에 ‘육군 대장 김수길 총정치국장’을 수행자로 보도함으로써 총정치국장의 교체소식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김정은 집권 6년(2012~2018) 동안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무려 4차례나(최룡해-황병서-김정각-김수길) 바뀌었다. 총정치국장의 잦은 교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군에 대한 당적 통제 조치 강화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핵화 결정에 따른 인민군의 조직적·기능적 변화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식 군 재편을 위해 총정치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군 출신인 김수길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2013. 5~2014. 4) 재임 시절, 군 조직생활 전반에 관여한 바 있고 평양시 당위원장 기간 동안 당사업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총정치국장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임자라고 낙점 받은 것 같다. 다만 총정치국장의 편제 계급이 차수인데 반해 김수길에게 육군 대장

계급을 수여한 것은 기존 계급이 중장(2013. 5)이었고, 최고사령관의 기한(편제 계급 수여기간) 전 승급(한 단계 이상) 조치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 9일 혹은 그 이전(7. 27) 김수길에게 인민군 차수 계급이 하사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정각은 4개월 만에 교체되었을 정도로 임기가 짧았고 총정치국장 재임시 국무위 부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수길이 등용되기 전까지 과도기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총정치국에 대한 집중검열 사업에 따른 내부 동요와 급격한 세대교체에 의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기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민무력상 교체와 추가적인 군부 인사 교체 가능성

6월 3일, 일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하여 국내언론은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까지 3명의 주요 군부 인사가 모두 교체되었다고 보도하였다. 통일부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인사이동의 정황은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무력상은 박영식에서 노광철 인민무력성 제1부장으로, 총참모장은 리명수에서 리영길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으로 교체되었다. 노광철은 2015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대남 강경파로 알려진 박영식과는 달리 군 내 온건파로 분류된다. 따라서 인민무력상 교체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핵·미사일 폐기에 따른 군부의 혼란과 동요를 막고 14일부터 예정된 남북군사회담과 그 이후 전개될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김수길(68세), 노광철(62세), 리영길(63세)의 나이는 모두 60대로, 전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어 군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단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이들은 총정치국·인민무력성·총참모부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인 동시에 김정은의 군사정책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일영군체계를 실행할 인물들이기도 하다. 인민군 수뇌부 3인방의 교체는 매우 이례적이나, 군 주요 간부의 인사교체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에는 이르다. 핵무기와 ICBM이 폐기 단계에 들어선다면, 핵전력을 관할하던 전략군 역시 해체되거나 축소·재편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인사 조치가 회의에서 단행되었거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인민군 처우개선과 체제보위 기능 강화

인민군 처우개선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군인생활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한 군건설과 군사활동의 기본방향과 방도들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며 병사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의 열악한 배급 상황 및 생활환경은 군부대 이탈과 주민 약탈 등 군의 일탈과 기강 해이 문제를 야기해왔다. 특히 북한이 김정은 시기 들어 핵전력에 선차적인 자원배분을 진행해오면서 지상군의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면, 핵전력에 투입되던 자원과 재원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보급품 지급과 식량 배급 등 인민군 처우개선에 투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지도부는 인민군의 전반적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군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고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 체제보위 임무에 충실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군 본연의 역할 강조

회의에서는 주력군으로서 인민군의 역할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혁명무력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혁명적 군풍을 확립할데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으로 보아, 김정은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민군이 사상적으로 건전한 무장집단으로서 체제수호의 사명을 다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특성상, 체제내 저항세력, 특히 군부에 의해 실각할 확률이 높은 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군

에 대한 장악과 통제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인민군이 체제수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국가의 전략적 노선이 경제에 집중됨에 따라 군대의 여력이 경제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군의 사회통제 기능을 활용하여 자본주의 사상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를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시장경제에 진입할 경우 발생가능한 체제 동요의 효과적인 차단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인민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